

# 산재예방정책 추진방향

‘16.12.9



고용노동부

## I .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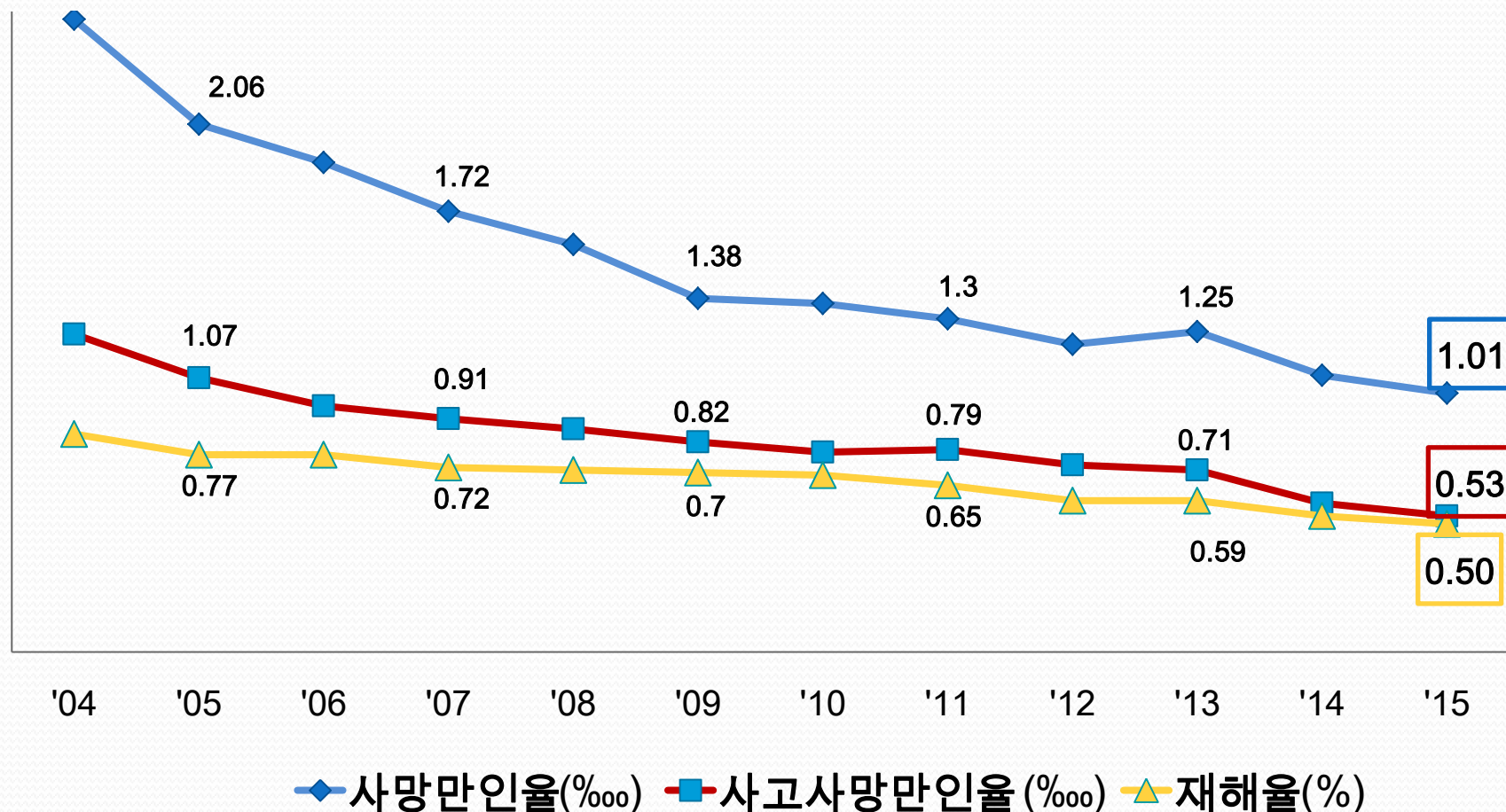
## II. 주요 현안 및 대응방향

## III. 마무리

# I. 산업재해 현황

## 1. 산업재해 현황

- 각종 산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가 '15년 까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I. 산업재해 현황

## 2. '16년도 산업재해 현황

- '16.10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소폭 감소
  - 사고사망만인율 (‰): ('15.10월) 0.45  $\Rightarrow$  ('16.10월) 0.44 0.01‰p 감소
  - 재해율(%): ('15.10월) 0.43  $\Rightarrow$  ('16.10월) 0.41 0.02%p 감소
- 다만,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대비 증가
  - 재해자수 : ('15.10.) 73,913명  $\Rightarrow$  ('16.10.) 74,102명 189명 (0.3%) 증가
  - 사고사망자수 : ('15.10.) 780명  $\Rightarrow$  ('16.10.) 795명 15명 (1.9%) 증가
-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의 증가는 건설업 재해 증가에 기인
  - 건설 재해자수: ('15.10.) 20,261명  $\Rightarrow$  ('16.10.) 21,519명 1,258명 (6.2%) 증가
  - 건설 사고사망자수: ('15.10.) 352명  $\Rightarrow$  ('16.10.) 401명 49명 (13.9%) 증가

# I. 산업재해 현황

## 3. 정책추진 여건[1]

-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물량 증가로 재해위험 증가
  - 국내 건설공사액/계약액:  
( '14 ) 195조/185조  $\Rightarrow$  ( '15 ) 214조 (9.3%  $\uparrow$  )/237조 (27.7%  $\uparrow$  )
-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수 증가 추세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비중(%):  
( '13 ) 81.5  $\Rightarrow$  ( '14 ) 81.0  $\Rightarrow$  ( '15 ) 81.6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명)/비중(%):  
( '13 ) 875만/56.6  $\Rightarrow$  ( '14 ) 972만/56.9  $\Rightarrow$  ( '15 ) 1,030만/57.3

# I.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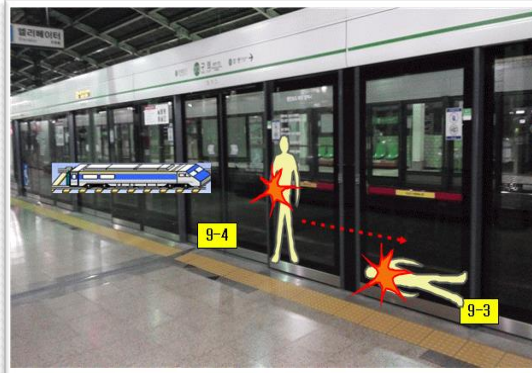
## 3. 정책추진 여건[2]

- 하도급 생산 방식이 확산되면서, 안전보건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측면
-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근로자



〈남양주 지하철 현장 폭발〉  
(‘16.6.1, 사망4, 부상10)

⇒ LP가스 용기 현장 방치, 가스농도 측정 미 실시, 환기 및 배기 미 실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협착〉  
(‘13~ ’16, 사망4)

⇒ 작업계획서(유지보수 매뉴얼) 미이행, 열차감시인 미배치 등



〈김포 건설현장 화재〉  
(‘16.9.10, 사망5, 부상1)

⇒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 실시,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점화원에 접근



# I. 산업재해 현황

## 3. 정책추진 여건(3)

- 하청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여론 증가

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작년 노동자 사고중 하청직원 40%

### 주요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

-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로 1명 사망
- 2015년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질소 누출 사고로 3명 사망
- 4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3명 사망
- 7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폭발 사고로 6명 사망
- 2016년 5월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사업장  
추락사 1명 등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서 5명 사망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사고로 숨진 4명은 모두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다. 지난 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19) 역시 외부업체인 은성PSD 소속이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사고 사망자 대 하청업체 직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지난해 6월 현재 40.2%로 늘었다.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의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청업

14명 사상자 낸 남양주 폭발사고...원청·하청·감리업체 '합작품'

입력시간 | 2016.08.26 17:10 | 유태환 기자

警, 수사결과 발표...5명 구속영장 신청·14명 불구속 일선  
현장 작업자, 사고 전날 LPG 밸브 열어서 가스누출  
원청·감리업체, 책임회피 위해 서류조작  
하청업체, '등쪽정지' 상태에서 공사수주·불법 재하도급도 실시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지난 6월 1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금곡리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공사 폭발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하준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지난 6월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는 물론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부실과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포스코 건설 현장소장 신모(50)씨와 하청업체 매일ENC 대표 이모

[사설] 구의역 참사, '위험 외주화'가 주범이다

등록 | 2016-05-31 19:08

19살 지하철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예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남긴 가방에 담긴 칼라면과 나무젓가락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온라인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몇차례 되풀이돼 왔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차분히 되짚어보고 대책을 다시 다는 것은 어떤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일 것이다.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직원 김아무개군은 5월29일 오후 5시55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고장 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고치다 2분 뒤 승강장에 들어오던 열차와 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서울메트로 측은 김군이 구의역 쪽에 보고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열차 운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인1조' 작업 원칙의 안전매뉴얼 자체가 지켜지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갓 입사한 김군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님은 자명하다.

2013년 서울 성수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메트로 쪽이 안전매뉴얼을 만들었으나 2인1조 지침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한다. 혼자 일할 때도 인력이 부족했는데 2인1조 지침을 만들면서 그만큼 증원을 하지 않았으니 비현실적인 지침이었던 셈이다.

또 안전문 오작동이 1시간 이상 계속되는데도 폐회로 화면을 통해 승강장을 볼 수 있었던 구의역 역무원들이 사고 순간까지 아무 조치 없이 숙무척이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험작업의 외주화에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잇따른 사망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악습이 이번 구의역 사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원청에 비해 열악한 하청업체는 안전보다 경비 절감을 우선하기 마련이다. 같은 일을 정규직이 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구간과 달리 외주업체에 맡긴 서울메트로 담당 구간(1·4호선)에서만 사망사고가 3차례나 발생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2014년 안전문 관련 고장·정체가 서울메트로 관리 구간에서 도시철도공사 구간보다 6배나 많았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위 조사와 대책 마련은 물론 인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해온 시스템, 이 시혜로 안전한 외주화 문제도 정면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I. 산업재해 현황

II.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III. 마무리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1. 하청근로자 보호대책 추진(1)

####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강화(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 작업범위 확대(현행 20개 장소 → 모든 작업)
- 산재예방 의무 위반 시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 상향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제출('16.6.28)

- 원청의 위험정보 제공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화학물질 제조설비의 개조, 분해작업 ⇒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추가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내 국회제출 계획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1. 하청근로자 보호대책 추진[2]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활성화

- 모기업이 사내 · 외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개선
  - ‘16년 상반기 발생한 메틸알코올 사고를 계기로 우대 방안을 강화하여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외 협력업체 참여 유도(3월부터 추진 중)
  - 우수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유예, 정부포상 우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16년 모기업 992개소, 협력업체 8,584개소 참여 (전년 대비 8% 참여 증가)
-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공장은 참여(‘12년부터 참여) 이후 원 · 하청 모두 재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 달성(사망재해 없음)
  - 원청 재해율(%): (‘11) 3.82 ⇒ 프로그램 참여 ⇒ (‘12) 0.46 ⇒ (‘15) 무재해
  - 협력업체 재해율(%): (‘11) 1.48 ⇒ 프로그램 참여 ⇒ (‘12) 0.47 ⇒ (‘15) 0.20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1. 하청근로자 보호대책 추진[3]

#### 원 · 하청 산재 통합관리

- 원청의 책임이 있는 하청의 산업재해 통계를 원청에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조선·화학 등 고위험 업종의 원 · 하청 포함 1,0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약 50여개소)으로 시범 조사('16.3 ~ 11월) 실시
  - 제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원청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범조사 추가 실시('17.3 ~ 11월) 실시 계획
- ‘16년 실태조사 결과 등으 바탕으로 원 · 하청 산재 통합관리 방안  
[법령 개정안 포함] 마련('17년 상반기)
  - 적용업종 및 규모, 하청의 범위(업무연관성, 전속성 등), 공표범위, 시행시기 등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2.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집중감독 및 처벌확행[1]

#### 재해다발 사고 유형별 기획감독 추진

-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에 대해 전국적으로 재해다발 시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17년도에도 지속추진)
  - 감독 전 주요예방대책을 고지하여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감독 후 결과를 홍보하여 안전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 지속 유도
    - 추락재해예방 2,493개소('16.3월 ~ 5월, 9월 ~ 10월)
    - 질식재해예방 1,120개소('16.6월 ~ 8월, 12월 ~ '17.1월)
    - 화재사고예방 1,500여개소('16.9.26 ~ 10.28)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2.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집중감독 및 처벌확행[2]

#### 건설업 재해 취약시기 및 재해다발 사업장 집중감독

- **건설현장 재해 취약시기[해빙기 · 장마철 · 동절기] 집중감독**
  - 해빙기(2.22 ~ 3.11): 889개소 감독, 399개소 사법처리, 737개소 과태료 부과
  - 장마철(6.1 ~ 6.24): 1,446개소 감독, 652개소 사법처리, 1,148개소 과태료 부과
  - 동절기(11.7 ~ 11.25): 840개소 감독, 결과 취합 중
-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50대 건설사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 (1건) 경고 → (2건) 재발방지계획수립·보고 → (3건) 전국 현장 기획감독 실시 → (4건) 대표이사 면담 → (5건) 본사 특별감독 실시
  -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 CEO 면담을 통한 재해예방 노력 촉구
-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중 50대 이내 4개 건설업체 408개 현장, 51위 이외 29개 건설업체 144개 전국 현장 감독 실시**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2. 안전보건 취약사업장 집중감독 및 처벌확행[3]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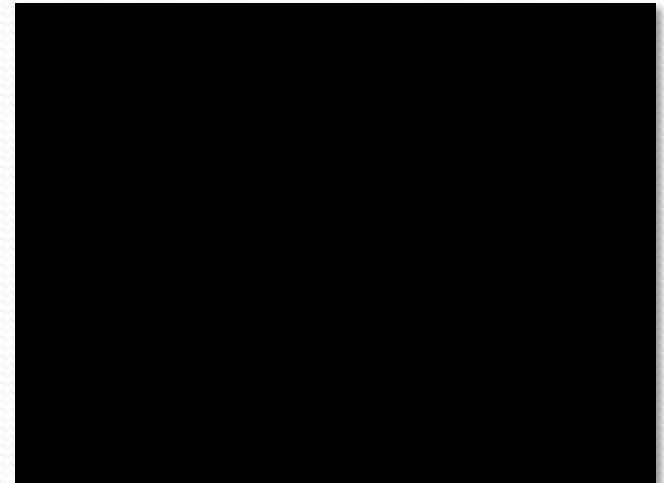
-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망사고는 구속수사 및 형사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원청의 책임여부도 수사하여 송치
  - 대형사고(구미 불산누출, 여수 폭발사고 등)에 대한 구속 및 실형선고
- 사법처리와 별도로 당해 사업장의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으로 위험요인 제거하고, 다음연도 개선여부를 재차 확인
  - 작업중지: ('13) 518개소 → ('14) 457개소 → ('15) 525개소 → ('16.9월) 407개소
  - 안전보건진단명령 건수: ('13) 292건 → ('14) 669건 → ('15) 935건 → ('16.9월) 821건
  - 개선계획수립명령 건수: ('13) 96건 → ('14) 384건 → ('15) 761건 → ('16.9월) 745건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3.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정착 유도[1]

#### 대형사고 예방 캠페인

- 3대 유형(화재 · 폭발, 질식 · 중독, 무너짐) 중심의 대형사고 예방 캠페인 집중 송출
- 지하철 행선안내기, 산업안전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 영상 송출
- 원청의 안전책임 필요성 및 공생협력 프로그램(우수사례중심) 등을 주제로 홍보강화 및 원 · 하청 상생 캠페인 전개





## Ⅱ. 산재예방 정책 추진방향

### 3.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 유도[2]

#### 안전보건 문화 확산

- 안전점검의 날을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개최하고, '17년에도 기획감독과 연계된 주제를 매월 선정하여 효과 극대화
  - '17년에는 근로자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등) 준수 캠페인도 전개
- 건설, 조선, 화학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CEO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리더회의” 를 ‘17년 상반기 추진
  - 건설(도급순위 50위 이내 건설업체), 조선(주요 조선업체 10개사), 화학(정유 및 석유화학업체 20개사)



I. 산업재해 현황

II. 주요 현안 및 대응방향

III. 마무리

# Ⅲ. 마무리

## 당부사항

-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보건의지 및 지속투자
-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보건 격차해소
- 산재은폐 등 잘못된 관행 근절
- 안전보건수칙 준수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경영계의 노력 강화
- 기업단위를 초월한 경영계 차원의 안전보건 대응노력 강화



**감사합니다.**